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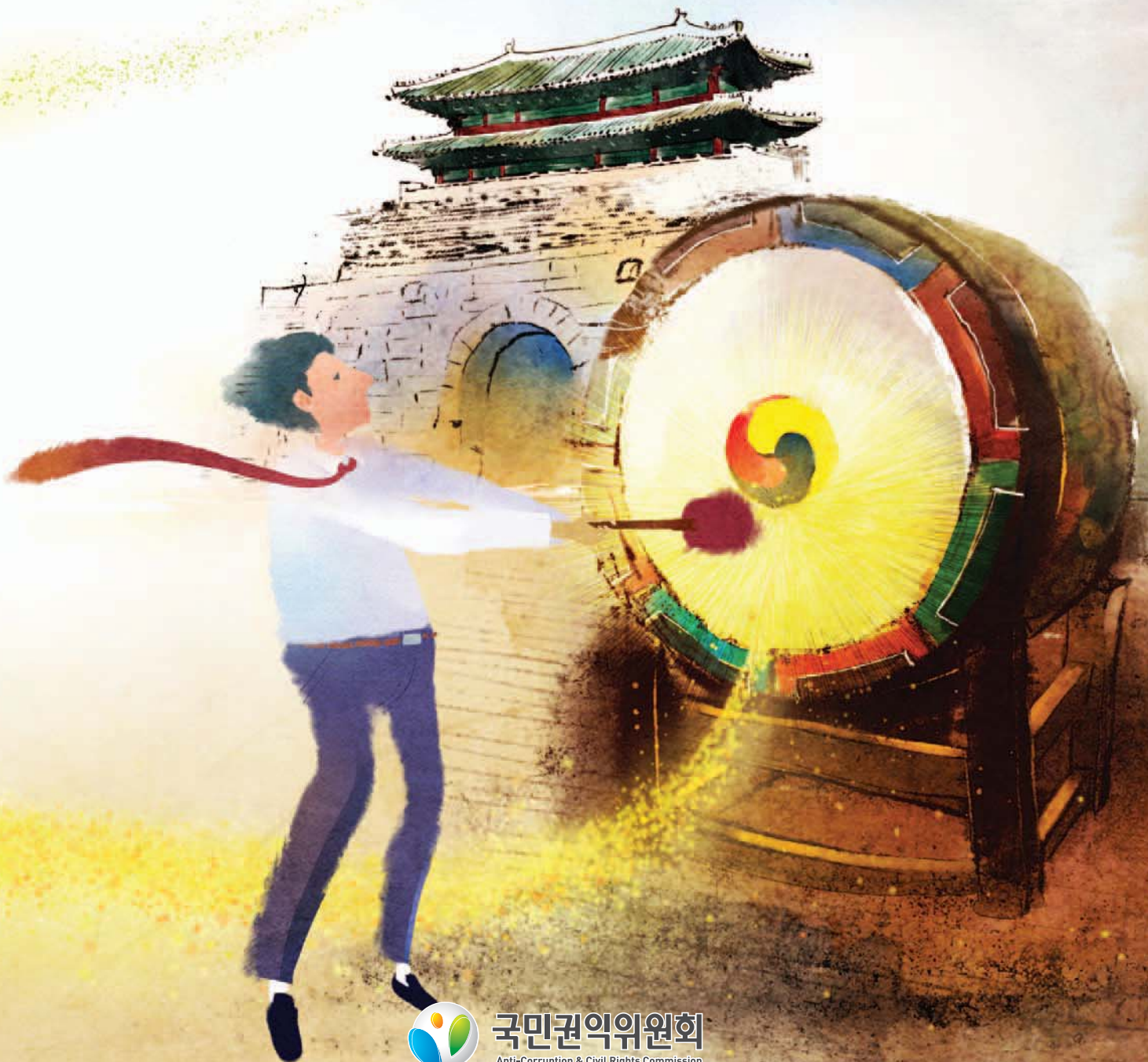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01.0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09 | Vol.06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하하하 ♪ 호호호~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웃는 그 날까지

예부터 ‘웃는 집안에 많은 복이 깃든다(笑門萬福來)’ 고 했습니다. 옛사람들 역시 웃음이 우리네 삶에 전하는 다채로운 이로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게지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이지만 한 번씩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따분한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어깨가 축 처진 동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도 바로 당신의 웃음입니다.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힘차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01.02 | 2009 | Vol.06



세상사는 풍경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04

특집

2009,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린다!

신년사 | 2009년, 코뿔소처럼 '치고 나가는 진취적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08

신규사업 리포트 | 국민소통 창구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10

Talk2009 |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14

통

소통

해외 청렴 리포트 | 부패척결의 성공케이스, 홍콩

18

국민생활공감

솔로몬의 선택 | 부도난 회사의 임금 체불, 어떻게 만나요?

22

고충처리 카페 |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처리 사건

24

민원실 풍경 | 위장결혼에 무너진 순수한 남자의 진심

26

기분 좋은 편지 |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족은 행복합니다

28

기분 좋은 만남 | 민원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30

청렴예찬 | 2008 청렴도 종합우수그룹 경기도청

32

아름다운 약속 |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 사용 금지

35

感

여유

여행의 재발견 | 황희 선생 유적지를 가다

38

문화로 보는 세상 | 재즈의 시대에 펼쳐지는 진실의 목소리 영화 <체인질링>

42

돈 버는 방법 | 나도 대출이 될까?

44

생활법률110 | 운전 달인도 아리송한 '뺑소니'

46

ACRC NEWS

48

ACRC 광고

49

국민 참여 마당

50

“우리 엄마 이름은 가토미키예요”

길을 걷거나 TV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다. 그런 만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 역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외모만 조금 다를 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일상을 나누는 또 하나의 이웃이다.



가토미키 씨와 그녀의 딸 승희와 승혜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에서는 조금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웅기쭈기 모여 앉아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한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다. 베트남과 몽골,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그 어머니(아버지)의 나라는 다양하지만,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자녀들이다.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언젠가 성장해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우리의 아이들이지 않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수업을 듣는 승희와 승혜 역시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승희와 승혜의 어머니 가토미키 씨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지난 2000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이다. 승희와 승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지만,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위의 시선이 곱지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만큼 성장해서 괜찮지만,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속상해하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사람이야, 한국사람이야?’라고 정체성을 묻는 아이들 모습을 곁에서 볼 때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그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금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그들’에서 ‘우리’로 나아가야 할 시기

이처럼 우리는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정서로 다른 나라 국적을 지닌 엄마를 둔 아이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시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까지 생긴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는 만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보다 유연해져야 할 시기다. 우리와 외모나 성장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감대를 높여가는 마음자세일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 땅 위의 모든 승희와 승혜가 엄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본다. “제 이름은 이승희예요. 하지만 우리 엄마 이름은 가토미키예요” 라고. 🌈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는 시민단체 푸른 시민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9월 9일 개관된 '모두'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서 7천 권, 국외서 4천500권을 보유하고 있다. (www.modooobook.org)



특집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하나되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 정부업무 평가제도 운영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는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 ·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해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익향상을 꿈꾸는 국민권익위가

2009년 한 해에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13** 양건 위원장 '신년사'

***10** 2009 국민권익위원회 '신규사업리포트'

***12**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 2009년, 코뿔소처럼

‘치고 나가는 진취적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신 년 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만,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축년의 결심은 어느 해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국민소통 창구’를 자임하는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위원회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15% 이상 민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일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8% 단축시키고, 인용률을 약 14%나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서는 9개 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 303개의 과제를 발굴·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지난 10월 스웨덴 ‘e챌린지 2008 컨퍼런스’에서 여러 IT선진국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 민원 감축 방안은 ‘중앙창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0콜센터도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상담을 대행하여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부콜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청렴도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여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시행한 『2008년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도 위원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9년 위원회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뛰어 오를 것입니다.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의 기본적인 안정을 이루어 냈다면, 올해에는 위원회의 존재의의를 전 정부 부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부 업무 지원을 넘어 선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꿈꾸며

올 한 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치고 나가는 진취적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흔히 위원회를 ‘정부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라고 겸사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A/S 기능도 수동적·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적극적 자세로 전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의 지원을 넘어 선도적으로 정책수행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늘어난 민원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더 충실하게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권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또한 부패방지업무에서 행정규칙 개선 등 상당한 업적을 이루어 냈지만 올해에는 좀 더 직접적인 부패방지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부패방지 업무는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누수현상 없이 제대로 실효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경주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늘어나는 업무량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심판업무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 자세로 필요한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찾고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법령·제도 개선에 힘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는 공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 사건의 처리를 넘어 법령,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도개선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단순한 A/S 기능을 넘어 선도적 정책수행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지원업무 분야 또한 조직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위원회의 기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2009년 올 한 해 부패방지, 행정심판, 고충처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모든 부서는 '치고 나가는 진취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의 과정을 거쳐 더욱 진취적 자세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은 소의 해입니다.

위원회는 코뿔소처럼 '치고 나가는 진취적 자세'를 가지고 올 한해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온 국민과 위원회의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건

*국민소통 창구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12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200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경제활력 제거요인 개선,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공직 부조리 근절 등 정부와 국민의

가고 역할을 강화해 국민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가 2009년

아심차게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요약 소개한다.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2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3 국가 희생자들의 권익증진 노력

4 눈먼 예산, 새는 예산 점검

5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0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기관별로 별도 창구가 운영되어 국민이 도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상담·안내해 주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해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 안전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와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 분야, △생계침해 범죄분야 등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8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서민 밀착형 무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범정부적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주간단위로 주요 민원동향정보 ‘Weekly Report’를 각 기관에 전달하고,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2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한다.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문조사관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발견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해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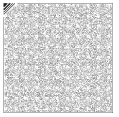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를 높이도록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 기업 '전담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등의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3 국가 희생자들의 권익증진 노력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이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정책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명예와 긍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즉,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제대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한 사례들을 발굴해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납북자와 그 가족의 지원현황, 의사상자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도 민원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4 눈먼 예산, 새는 예산 점검

정부예산 조기집행 과정의 위법·부당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점검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청렴도 하위기관과 국책금융기관, 고용촉진사업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대상의 불공정한 선정이나 예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864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각 기관에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올해 실시하는 점검강화 조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다.



5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사회위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이 신분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상반기 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국민권익위에 마련된 '기업음부즈만' 상담 창구에 민원인들이 들어서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08년 10월 30일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부정부패 뿌리를 뽑아주세요

얼마 전 손자녀석과 함께 신문을 읽는데 “할아버지, 부정부패가 뭐야?”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밖에 되지 않은 손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얼버무렸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때에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모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식(건물 관리인, 63세)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제가 주방장을 한지도 20여 년이 되어가는데, 요즘처럼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신문이나 TV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소상공인들이 권리를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조흥영(주방장, 48세)



소외된 계층까지 안아주실 거죠?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인지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 국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률(장애인 심리상담사, 46세)



학생에게도 힘을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어주세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저는 군복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 전보다 훨씬 늘어난 등록금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없는 서민, 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힘든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진(대학생, 25세, 오른쪽)

올해로 대학졸업반인 저는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숨이 탁 막혀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힘을 주세요.

문성해(대학생, 24세, 왼쪽)

밝고 투명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항상 들려오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불안한 치안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약자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약자들도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안화영(회사원, 31세, 오른쪽)

세계에 불어 닳친 경제위기로 직장인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기업의 도산 소식은 물론 직장인 감원 소식까지 지금 직장인들은 비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으로 이끈 것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장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켜주세요.

장원순(회사원, 29세, 왼쪽)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자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기관이라면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학교 차원에서의 배려도 절실하고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파이팅!

김정연(푸른시민연대 상근활동가, 38세)

국 민 을 행 복 하 게

생 화 공 가



18	해외 청렴 리포트
22	솔로몬의 선택
24	고충처리 카페
26	민원실 풍경
28	기분 좋은 편지
30	기분 좋은 만남
32	청렴예찬
35	아름다운 약속

통, 소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등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는 국민권익위.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
국민권익위의 중심에는 ‘행복한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가장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부패척결의 성공케이스

홍콩

“홍콩을 정의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의 지배’이다(If Hong Kong has a defining ideology, it is the rule of law).”

‘아시아 속의 세계 도시(Asia’s World City)’를 표방해 온 홍콩의 홍보 책자의 첫 장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다.

이는 10여 년 전 버스 등 대중교통의 파업 때 ‘준법은행 투쟁’이라는 구호가 등장해 주한 외국인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먼 나라의 얘기’로 들리는 구절이다.

인구 680만 명의 홍콩(중국 특별행정구)의 공무원들에게 ‘법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자 몸에 깊이 밴 생활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도 홍콩특파원 시절 초기에는 교통 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은 물론 빈 정류장도 지나치지 않고 정차해 확인하는 등 철저히 승객의 편의 위주로 운행하는 버스 운전자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곤 했으나 점차 홍콩의 법치사회와 문화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

이희경 주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소장은 “홍콩 공무원들은 ‘법치’야말로 월드 아시아 홍콩을 있게 만들어 준 첫째 조건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서 “홍콩 정부나 관리들이 청렴이나 법치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시아에서 청렴도 2위, 홍콩

2007년 3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발표한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홍콩은 2006년도에 이어 싱가포르와 나란히 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위험건설팅회사인 PERC가 당시 아시아 13개국의 기업인 1,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들이 체감하는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3위인 일본(2.1)보다 4.2포인트나 뒤진 6.30을 얻어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는 물론 부패 오명에 시달려 온 중국(6.29)에게도 뒤진

홍콩노와르라는 영화장르를

탄생시켰을 정도로 홍콩에는

경찰과 폭력조직 간의

부패를 담은 영화가 많다.

1970년대 홍콩은 영화처럼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

홍콩은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1974년

염정공사(廉政公署,

ICAC-HongKong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출범시켰다.

부패방지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홍콩은 아시아 2위의

청렴국가가 되었다.

PERC의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2007년 3월)

국 가 명	2007년 지수	2006년 지수
싱가포르	1.20	1.30
홍콩	1.87	3.13
일본	2.10	3.01
마카오	5.11	4.78
대만	6.23	5.91
말레이시아	6.25	6.13
중국	6.29	7.58
한국	6.30	5.44
인도	6.67	6.76
베트남	7.54	7.91
인도네시아	8.03	8.16
태국	8.03	7.64
필리핀	9.40	7.80





8위에 그쳤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8년 9월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홍콩은 10점 만점에 8.1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위였다. 한국은 5.6점으로 40위였다. 10점 만점인 부패인식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체감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뜻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기관 '염정공서(廉政公署)'

폭력조직과 연계된 '부패 경찰'은 홍콩 느와르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30년 전 만해도 홍콩은 부패와 혼란이 많았으나 관련법 도입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부패 이미지를 떨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콩 정부 관리들은 부패추방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 또한 '청렴사회 홍콩'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한다.

부패전담 조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서장을 역임한 엠브로즈 리(李少光) 홍콩 보안국장(장관격)은 지난해 11월 방한 중 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콩이 세계적인 청렴사회로 변모할 수 있었던 양대 원동력은 염정공서 설치와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이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홍콩정부의 의지와 주민들의 부패청산

염정공서는 1974년 설립된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효과적으로 부패에 대응, '클린 홍콩'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패방지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력"을 강조했다. 부패사범의 기소, 처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염정공서를 설립한 뒤 국민교육에 치중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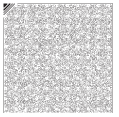
당시 실제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부패 문제와 신고의식 교육을 했고, TV와 라디오 광고도 적극 활용했다. 또, 부패의 토양을 없애기 위해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잘라냈으며, 공무원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 매체도 감사원 기능에다 검찰 수사권까지 합친 염정공서 직원이 부패관리를 단속하는 활약상이 담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을 자주 편성해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염정공서는 1974년 설립된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효과적으로 부패에 대응, '클린 홍콩'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패방지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앵브로즈 리 보안국장은 "홍콩도 60~70년대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해 민원을 낼 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부패가 척결될 수 있었다.

홍콩의 반부패방지기관인 염정공서 건물 외관





염정공서는 사후 조사 뿐 아니라 사전 예방 및 반부패 홍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홍콩시민의 비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하는 등 부패척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 자평했다.

사정기관과의 견제와 균형 관계

염정공서는 행정장관 직속의 강력한 기관이지만 검찰 및 법원과 견제와 균형 관계에 있어 옥상옥(屋上屋) 문제나 업무중첩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패정부’의 대명사였던 홍콩 경찰이 아시아 최고(Asia's Finest)의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염정공서의 활약덕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70년대에 한 영국인 홍콩경찰에 대해 경찰 내사과가 비리 혐의를 조사하자 특권을 이용, 영국으로 도주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염정공서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간부들 사이에 자신부터 깨끗해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새로 채용한 경찰에 대해서도 청렴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최우선으로 교육이 강화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콩은 인구대비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치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율도 낮아지고 체포율도 높아졌다. 그 결과 개방적이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게 됐으며 특히 치안과 보안 분야는 주변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홍콩 정부는 1995년 Triad(삼합회:홍콩범죄조직) 및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수조직을 가동했다. 그 결과 삼합회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됐다.

특히 조직범죄에 대응한 경찰력 강화 및 조직범죄 활동 신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조직범죄에 대해 중형을 적용한 결과 실효를 보고 있다. 폭력조직들이 젊은이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조직의 활동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결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 중 삼합회가 개입된 것은 3.0%에 불과하다.

부패청산, 정책만으로 한계...국민의 몫

홍콩은 염정공서의 설립으로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사회로의 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염정공서는 하나의 시스템과 정책일 뿐,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신뢰일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러 모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



●

1 2. 염정공서의 반부패캠페인 홍보 포스터 3. 염정공서의 활약상을 영화로 만들어 대국민 교육에 이용했다 4. 2002년 염정공서의 서장을 거쳐 홍콩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엠브로즈 리(李少光, 60) 홍콩 보안국장. 사법권을 가진 염정공서가 공무원을 집중 감시하고 단속한 것이 부패척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사진제공_연합뉴스)



부도난 회사의 임금 체불, 어떻게 받나요?

체당금지급 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업체인 △△회사(이하 '회사')의 직원 강모씨 외 91명(이하 '청구인들')은 2007년 3월 말경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다. 생업의 일터로 삼아왔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해버린 것.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일용직 근로자만 40명이 넘는 꽤나 규모가 큰 업체가 고작 설립 8개월 만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 이전에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할 월급이 무엇보다 아쉬운 판국이었다. 부디 무사히 임금되기만을 바라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은 총 2억 5천만 원가량으로 가만히 앉아 마음 놓고 있어도 될 만한 액수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들 중 회사 부장으로 토지영업과 직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모씨가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이후, 회사의 도산 등에 대한 사실인정 신청서를 2007년 7월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건 수습의 첫 단계를 밟았다. 해당 지청은 즉시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회사도산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대표이사의 자산과 채무상태를 조사했는데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사업이 재개될 전망 또한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회사 측에서 대표이사의 폐업신고가 있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미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업 활동이 정지된 날짜보다 5일 앞선 날짜에 청구인들이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기한 내 신청이 인정되었다.



IMF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경기 한파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과 비례하게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산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길 없어 막막한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명쾌하게 해결한 행정심판사건 중 하나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객관적 자료가 없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청구인들의 간절한 희망이 오매불망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지명수배 중이라는 소식은 청구인들에게 더 큰 불안감으로 엄습했다.

이제 청구인들은 각자의 근무기간과 체불내역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내역이 기재된 해당 부서장 11명의 확인서가 제출됐다. 청구인들 역시 개개인의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전화요금 미납요금 명세서, 진정서 등을 수집하여 해당 지청에 체당금(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청에서는 ①청구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다는 사실, ②임금대장과 출근부 등을 잃어버려 청구인들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 회사 부사장과 총무실장 등의 진술, ③회사 대표이사가 2007년 8월 말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전국에 수배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대신 회사의 부서장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거나 메모 내지 다른 부서장들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근무기간 및 체불내역에 대한 확인서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청구인 측에서 선임한 노무법인에서 제출한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1월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지급 부적격 판정, 즉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무기간과 체불임금 증거자료 보강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던 지난 7개월 동안의 급여장부를 담당세무회계사무소(이하 ‘회계사무소’)에서 어렵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덧붙여 이 회계사무소 직원 김모씨로부터 “매달 10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매월 5일 경 회사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자료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잠적하기 직전에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대략 90명에 대해 2억 5천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했으며,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대표이사 진술조서도 찾아냈다.

청구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침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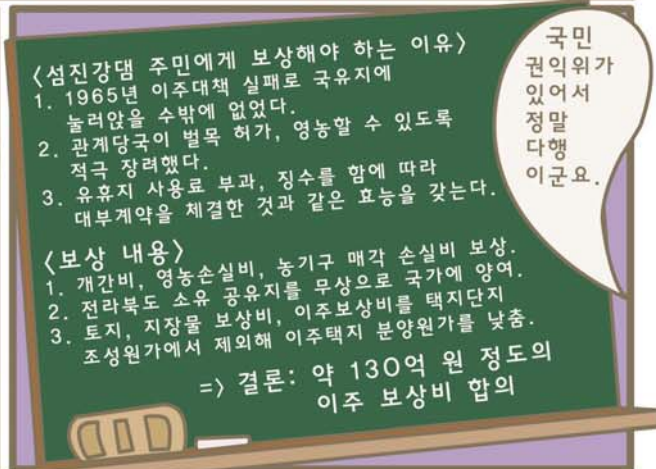
그러나 총 92명의 청구인 중 12명은 안타깝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중 11명의 이름은 출근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 측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나머지 1명은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해달라는 신청서조차 해당 지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인 통지를 받은 일도 없었기에, 다른 청구인들처럼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당사자 명단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의무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야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대목이다. 권리구제에 있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





— (이)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처리 사건





국민고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문을 두드리세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들의 하루는 늘 분주하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안내를 하기에 하루에도 수천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사의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국제결혼을 한 남자의 전화였다. 남자는 중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되는 일인데, 그 남자는 조심스러워했다. 남자는 자신의 부인이 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그러한 사연을 들은 상담사의 마음은 찡해졌다. 위장결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지만 그 남자의 순수한 마음에 난 생채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위장결혼에 무너진 순수한 남자의 진심

110 콜센터 상담원 수기

더위가 최고조에 이른 지난 8월의 어느 오후. 창밖에 보이는 8차선 도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몸살을 앓고, 콜센터 동료들 역시 더위에 조금씩 지쳐갈 즈음 전화벨이 울렸다.

“어...저기...” 다급하게 울리는 벨 소리에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니 혹시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안히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용기를 얻었는지 잠시 후, 조금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중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중국 여자, 결혼, 가출. 이 세 가지 단어에 ‘위장결혼’이란 결론이 나왔고, 순간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란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10 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경찰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물쭈물하면서 중국 여자랑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돈을 번다는 핑계로 가출했다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그를 살살 달래면서 ‘내가 상황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약간 고민하는 눈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세한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위장결혼, 막막한 마음에 상담 요청

중국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했다고 과감히 밝혔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주변을 통해 알아보니 그 여인은 이미 중국에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한국에 1년동안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 위장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 피해자로 민원인이 걸린 것이다.

그녀는 관계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조만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중국 여자가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았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본인이나 중국 여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여자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것이다.

상담원의 본분을 다해 위장결혼을 당했을 시, ‘외교통상부’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변경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주었다. 그러나 마음이 석연치 않았다. 이미 서로 결혼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 중국 여자를 기다리는 민원인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게 느껴졌고, 그 순수함을 이용한 피의자가 괘씸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을 이번 상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업무 안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민원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110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박영준 조사관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사관님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기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성북천 복개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면서 발생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건으로 2006년부터 성북구청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산가족으로 한국전쟁 때 남하하지 못해 생사를 알 수 없는 분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때 협의이혼 후 별거 중이 셧고, 슬하의 남매는 친모에 의해 길러지고 있었으며 전쟁 당시 친모는 아들만 데리고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한에서 저희 어머니와 재혼을 한 뒤 세 명의 자식을 키우셨으며 그 후 이산가족 특별법령에 따라 북에서 낳은 자식들을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은 서울시 철거민을 위해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하는 법의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북에 계실지 모르는 분의 포기각서 규정 하나에만 얽매어 저희가 받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저를 대신해서 일흔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가족 중에서 법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외삼촌과 함께 직접 변호사사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원, 법무사사무실, SH공사, 성북구청, 시청 이북5도청 등을 수도 없이 방문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했지만 북에 계신 분의 친모가 극구 꺼리셔서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이산가족을 위한 법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상담해주는 변호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사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불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보라며 이야기했고 지난 2006년 속는 셈치고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국민권익위로부터 방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도로수자원민원과의 박영준 조사관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빵을 선물로 드렸는데, 극구 사양하시며 지금까지 왜 어머니 힘드시게 직접 돌아다니시게 했느냐는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에 계신 분의 실종선고심판청구를 그분의 친모께서 극도로 꺼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했다가 실패한 것을 말씀드리자, 저희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니 조사관님께서 처리사항을 전화나 팩스로 알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가 뵈겠다고 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며 전화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지난 늦은 밤에도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셨고, 제가 문의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이 일은 저희만의 일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당면할 수 있는 일이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따뜻했던 말씀과 진심으로 도움을 주시려는 조사관님의 태도에서 어머니와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이후 조사관님은 처리 방법을 찾아보면서도 다시 한 번 북에 계신 분의 친모를 설득해 보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실패하자,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구청과 또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박영준 조사관님께서서는 저희를 돕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성북구청에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북구청은 국민권익위가 상급기관이 아니라며 계속 구청 담당자의 의견을 내세웠고,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여담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11일이 되어서야 성북구청과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저희를 도와주셨던 조사관님에 대한 고마움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저와 제 가족은 물론이고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 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박영준 조사관님과 같은 분이 계시는 국민권익위가 있기에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준 조사관님, 조사관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

2008년 11월 24일
상계동 최자운 드림

고 마 위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인해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 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대변인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junmin79@acrc.go.kr

민원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박영준 조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힘써준 박영준 조사관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였다. 과연 민원인은 어떤 감동을 받았길래 권익위가 박 조사관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것일까? 박 조사관을 찾아가 민원인을 감동시키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To. 도로수자원민원과 박영준 조사관 님

저는 성북천 복개사업으로 집이 철거되면서 발생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건으로 2006년부터 성북구청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산가족으로 한국전쟁 때 남하하지 못해 생사를 알 수 없는 분이 호적에 등재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은 서울시 철거민을 위해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하는 법의 원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복에 게실지 모르는 분의 포기각서 규정 하나에만 얽매어 저희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직장생활로 잦은 외출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7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외삼촌과 함께 직접 법원근처 변호사사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원, 법무사사무실, SH공사, 성북구청, 시청 이복5도청 등을 수도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실종선고선판청구를 했지만 친모의 극구 꺼림으로 법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이산가족을 위한 법까지 없어 상심해주는 변호사들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불친절하여 안이 함났을 때 누군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야기했고, 2006년 속는 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한번 찾아갔는데 박영준 조사관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빵을 사가지고 갔지만 극구 사양하시며 저에게 왜 어머니를 힐드시기 직접 돌아다니시게 했냐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최자은 민원인이 보낸 편지

새벽 6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박영준 조사관(고충처리부 도로수자원민원과)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체크한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박 조사관은 도로수자원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파악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뒤 국민권익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일을 한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편지까지 써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조사관 모두는 민원을 해결할 때 마치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박 조사관은 민원인이 일흔의 노모와 국민권익위를 방문하였을 때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찡했다.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관공서를 수십 번 오갔다고 하니 우선은 노모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하는 최자윤 민원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로 상황을 전달했다. 이처럼 그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이 조사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민원인이 국민권익위를 찾아올 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 본 후인 것이다. 최자윤 민원인도 마찬가지였다. 최자윤 민원인은 한국전쟁 때 남하하지 못한 가족의 동의를 없다는 이유로 ‘국민주택임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박 조사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지만 이산가족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의견표명심의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해당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의 힘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조사관으로서 제일 안타깝죠. 이런 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권익위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인 국민권익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민원인의 행복한 표정은 나의 활력

박 조사관은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며 웃는다. 그리고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민원인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데 어찌 어렵다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말을 덧붙였다. 고충을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인사하는 민원인들의 기분 좋은 표정을 볼 때면 일을 처리하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해소된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 때문이라도 그는 조사관의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조사관 업무는 큰 보람을 느끼는 만큼 힘든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관공서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중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죠.”

그는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관들이 자기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일에 대한 만족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매주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한다. 산을 타는 동안 받은 상쾌한 기운은 또 다른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원인의 권리와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박영준 조사관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든든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



부패 Down, 청렴 Up!

2008년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2위에 오르며 우수그룹에 도약했다. 2007년에는 청렴도 최하위에 머물렀던 경기도이기에 지난해 성과는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청렴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청을 찾아가 보았다.

2008 청렴도 종합우수그룹 경기도청





●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직원들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即死). 즉, ‘부패한 공무원
은 바로 죽지만, 청렴한 공무원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
다. 이는 2008년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우수그룹으로
뽑히자 경기도지사가 밝힌 각오다. 1년 전만 해도 경기도는 청
렴도에서 최하위 성적을 거두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지금은, 다
른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청렴도시가 되었다. 경기도를
청렴도시로 만들겠다는 경기도청 직원들의 ‘의지’와 ‘부패영
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부정부패 단절이 한몫을 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발 빠른 움직임

경기도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부패
영향평가’를 꼽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6
년 4월이지만 방대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모두 감시할 인
력이 부족해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시스템’
을 도입했다. 하지만 ‘자율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8년 국민권익위의 출범을 계
기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리고 권익위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가하고
자 시범기관(경기도청,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경기도 양
주시)을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경기도청이 시범기관으로 선
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기도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형성 있어서 2007
년부터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어요. 다른 기
관보다 1년 먼저 앞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의 문제점
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잘 알게 되
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청이 부패영향평가의 모델이 되
어주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남궁웅 주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상남도청 등 여러
시·도가 경기도청을 다녀갔고, 경기도청 역시 타 기관에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행착오로 이루어진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했을 당시, 아무런 선행모델도 없었기
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터. 이와 관련하여 조사담당관실
이용희 조사담당관은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의 부패영향평가
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07년만 해도 부패영향평가가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거
도 없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부패영향평가를 건너
뛰는 등 혼란이 거듭되었죠.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조례·규
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부패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면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될 수 없도록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바로 ‘전문성’. 부패영향평가에 대
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따
라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에게 자문
을 구하고, 기술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국민권
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자문관’의 자문을 빼놓
을 수 없는데, 이는 경기도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자문관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대한 형평성
과 전문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감사원 출신이 도와주고 있다.



부패영향평가?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와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소개부터 실무 세부사항까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선진국 사례 등이 많은 국민권익위에서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해주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만의 사례를 공유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었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기재직으로 일어나는 유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제한’을 마련하였고, 「경기도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 중 부정부당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경기도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소장의 재량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총 32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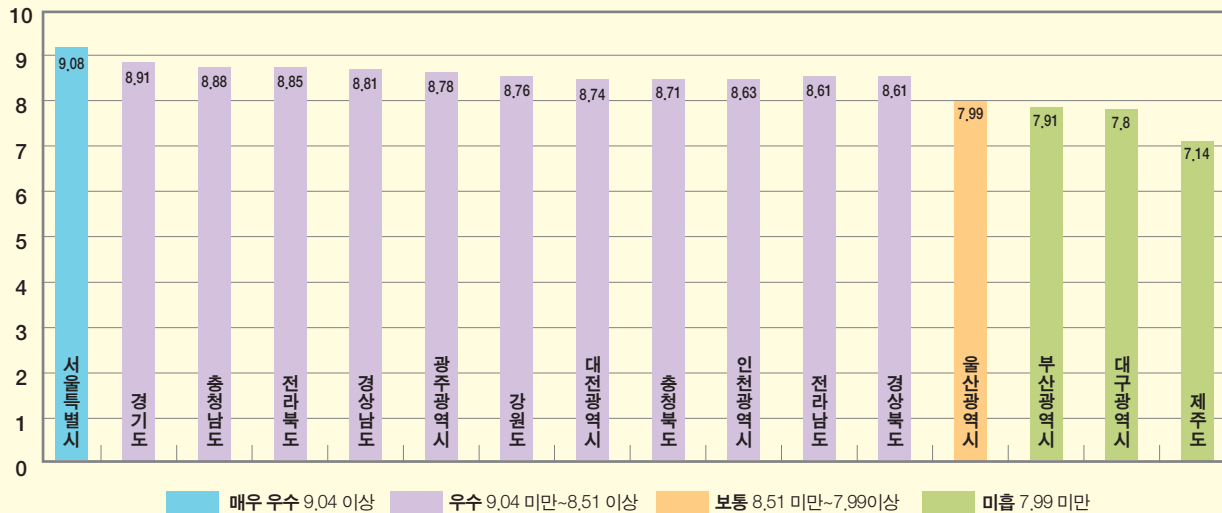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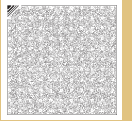
일 년 사이 청렴도를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끌어올린 경기도청. 과연 부패영향평가만으로 이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부패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금품, 향응 제공률 0% 달성’을 목표로 3대 중점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청렴 제고 시스템 구축·운영’,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부패예방기동감찰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직접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부패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부패예방기동감찰반을 통해 수많은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청 전 직원이 ‘클린명함’이라 하여, 앞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뒷면에는 청렴 메시지를 게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청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지사도 청렴 메시지를 발송하여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청렴의식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청의 노력으로 인해 경기도는 ‘청렴경기도’란 명예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명예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도시로서 다른 단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부담감과 압박감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청렴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광역시·도)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 사용 금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K씨.

어느 날 죽마고우 D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이야기 들었지? 그런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네가 관할 구청에 전화 좀 넣어주라.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말야.”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잠시잠깐 당황한 K씨.

“음. 그게 말이지, 조금 생각해보자. 뭐라 대답하기가...”

“야, 임마! 죽마고우 좋다는 게 뭐야. 아무 하자 없는 건물이야.”

“아이. 그래 뭐. 내가 전화 해줄게.”

그렇게 청탁을 받은 K씨,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앙부처에 있는 K입니다. 제 친구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일단 서류 검토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K씨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친구의 건축물 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명칭을 이용하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

결국 K씨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하지 맙시다!





38	여행의 재발견
42	문화로 보는 세상
44	돈버는 방법
46	생활법률110

感, 에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것이다.

단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밟아온 것 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

잠재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희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희망,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하고픈 희망.

가슴 깊이 묻어둔 희망을 꺼내어

나만의 노트에 써내려가 보세요.

당신의 희망이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感

여행의
재발견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글 | 김혜진 여행작가
사진 | 박성희



義勝恩則公恩勝義則私公私之分乃理難之源不可不慎也

의(義)가 은(恩)을 이기면 공(公)이 되고, 은(恩)이 의(義)를 이기면 사(私)가 되며,

공과 사의 분별은 곧 이(理)와 난(難)의 근원이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번잡한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시원하게 뿜린 한강변 자유로를 향해 달리면 경기도 일산을 지나 파주가 가까이 다가온다. 차창 너머로 강바람이 실려 들어오고 한낮이 아닌 때를 피해 찾으면 무리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점점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아득한 강 물결이 얼기설기 쳐놓은 철조망 때문에 생채기 난 것처럼 아쉬움이 들지라도 강과 길이 주는 여운은 잠시나마 일상에 심표를 주는 것처럼 잔잔한 여유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파주는 황희 선생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파주 적성현에 훈도(訓導)로 오면서 선생의 관직 생활은 시작되었다. 이후 68세에 사헌부의 상소에 의해 파직되어 파주 반구정으로 물러나 나랏일을 걱정하다가 곧 복직되었다. 86세에 부인이 사망하여 묻힌 곳도 파주 탄현면이고, 87세에 60여 년의 관직 생활을 마치고 물러나 여생을 보낸 곳도 파주 반구정. 3년 후에 세상을 떠나 잠든 곳도 바로 부인 옆이다.

황희 선생 유적지에는 선생의 생전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방촌기념관과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후손과 유림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촌영당(彬村影堂), 그리고 강을 향해 나앉은 정자 반구정(伴鷗亭)과 양지대(仰止臺)가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죽어 남길 자는 청렴할 ‘廉’_(렴)자 한 자이니

황희 선생 유적지를 가다



● 황희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방촌기념관



방촌. ‘잡살개 동네’라는 그의 아호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민초로서의 삶을 자청해 살았다. 죽을 때까지 움막을 짓고 살면서 몇 벌의 의복만으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하는 그의 삶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기념관과 영당이 무색할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다. 고려조의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30세(1392) 되던 해에 이성계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72현과 함께 두문동으로 들어갔던 황희는 “젊은 자네는 나가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라”는 선배들의 간곡한 권유로 두문동을 나와 새로운 정권에 참여했다. 반대 인사였다는 질시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태종이 등극한 후로 형조, 예조, 병조, 이조의 정랑을 거쳐 도승지의 전신인 지신사가 된 43세경부터 자기 소신을 펴기 시작했다.

그 후 공조, 병조, 예조, 이조판서를 두루 역임하면서 태종과 함께한 18년, 다시 세종과 함께한 27년, 그동안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18년이나 하면서 <경세유표>, <국조오례> 등을 편찬하여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내치에 힘써 태평성세를 이룩함으로써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등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했다.

천수를 누리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다

선생에 대한 술한 일화 중 하나. 두 계집종이 다투다가 황희에게 와서 고하는 말을 듣고 각자에게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 고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조카가 “하나가 옳으면 하나는 그른 법이지 어찌 둘 다 옳을 수가 있느냐?”고 하자 “응. 네 말도 옳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일에 관대했을 뿐 중요한 국사에 임하여서는 시비곡직을 분명히 하여 양영대군의 폐 세자를 반대하다가 유배되는 등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면서도 그의 관직생활 중에 좌천이 2번, 파직이 3번, 귀양 생활이 4년이나 되었던 것을 보면 세상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종서가 병조판서 시절 의정부회의에 참석했는데 자세가 바르지 못했던지 회의가 끝난 후 영의



● 1. 말년에 기러기와 함께 벗하여 지냈다는 반구정 2. 방촌기념관 내부 3. 후손과 유림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모신 방촌 영당

정이던 황희가 큰 소리로 “여봐라, 병판대감 의자 한쪽 다리가 짧은가 보다. 빨리 고쳐드려라”해서 깜짝 놀란 김종서가 의자에서 황망히 내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한다. 이를 민망하게 본 좌의정 맹사성이 퇴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관대하신 대감께서 유독 김종서에게는 왜 그렇게 엄하게 하시오” 했더니 “우리는 늙었고 장차 김종서가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니 그를 바르게 키워야 하지 않겠소” 했다고 한다. 갈매기를 벗삼는 정자 ‘반구정(伴鰐亭)’은 그가 말년에 강변에 앉아 세월을 보내던 곳이다. 본래의 이름은 임진강 낙하진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낙하정(洛河亭)’이라 불리다가 이후 언제부터인가 반구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반구정에서 남쪽으로 바로 이어진 등성이 위쪽에는 또 하나의 정자가 멋드러지게 서 있는데, 그 곳까지 층계가 나 있다. 정자의 크기는 반구정보다 작고 6각형인데, 이름하여 ‘양지대(仰止臺)’이다. 양지대는 원래 반구정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1915년 반구정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방촌 선생의 유적을 기리기 위해 육각정을 짓고 ‘양지대’라 하였다. 양지대 상량문에 ‘오직 선(善)만을 보배로 여기고 탄 마음이 없는 한 신하가 있어 온 백성이 우뚝하게 솟은 산처럼 모두 쳐다 본다. 아름답구나! 이 양지대란 이름은 시경(詩經)의 호인(好人)이라는 뜻을 취했다’고 적고 있다.

황희 선생은 세종 31년(1449) 87세 되던 해에 60여 년간의 관직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후 90세로 한양의 석정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 파주 탄현면 부인의 옆에 잠들었다. 🌈

Tip. 파주 황희 선생 유적지 찾아가는 방법

황희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 황희 선생 영당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상읍 사목리 산 122에 위치하고 있다.
(☎ 031-954-2170)

▶ 승용차 이용 시

1. 자유로 → 당동.C.(진입) → 사목리 방면으로 진행
2. 구파발 → 관산동 → 월릉 → 문산사거리(판문점방향) → 마정리 → 사목리 방면 진행

▶ 버스 이용 시

1. 시내버스 9710번(문산터미널→명동) 문산 중점 하차 → 3번 버스 환승 → 반구정 앞 하차
2. 시내버스 909번(문산터미널→서울역)문산 중점 하차 → 3번 버스 환승 → 반구정 앞 하차

황희선생영당(반구정)



재즈의 시대에 펼쳐지는 진실의 목소리

영화<체인질링>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신작 <체인질링>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영화는 1928년의 미국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LA에서 9살의 아들 월터와 함께 살고 있는 크리스틴 콜린스(안젤리나 졸리)는 전화국에서 교환업무 일을 관리하고 있다. 어느 날 아들과 영화 보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동료의 업무를 대신 봐주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일을 끝나치고 황급히 귀가해 보니 아들이 사라졌다.

<체인질링>은 초반부터 아들을 홀로 돌보며 사는 여인의 모습과 경찰의 무기력한 모습을 대비시킨다. 잠시 뒤 현실을 성토했던 개신교 목사(존 말코비치)를 통해 LA가 타락의 도시로 변화하였으며, 무엇보다 경찰이 휘두르는 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영화의 묘사를 따르자면, 1920년대의 LA 경찰은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크리스틴은 다섯 달 뒤 아들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기차역에 나아가 맞이한 아이는 그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 여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짜 아들을 안겨다 준 경찰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크리스틴을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간다. 경찰의 막강한 공권력은 힘없고 약한 여인을 아들을 돌보기 싫어하는 타락한 여인으로 매도한다.

변화하는 어머니 부패한 경찰과 맞서다!

초반부에 제시되는 크리스틴의 모습은 아들을 찾으려는 모성

에 호소하는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목사의 도움으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당한 어머니로 변모한다. 그녀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외로운 여인은 사람들의 지지 아래 경찰 청문회를 통해 또 다른 희생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을 한다. 그런 점에서 <체인질링>은 부당하고 억울함에 맞서 싸우는 어머니의 신화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인질링>은 단순한 휴먼 드라마에 머물지 않는다. 부패한 경찰 권력과 싸우던 그녀는 아들의 행방을 아주 엉뚱한 곳에서 알게 된다.

LA의 한 경찰은 캐나다로 이송되어야 하는 소년을 찾아 변두리 농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소년은 아주 끔찍한 진실을 경찰에게 들려준다. 자신의 삼촌은 아이들을 유괴하고 살해하는 연쇄살인마이며, 소년 역시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경찰이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소년은 잡혀 왔던 아이들을 지목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크리스틴의 아들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리스틴의 억울함이 밝혀지게 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크리스틴은 목사의 도움으로 풀려 나온다. 하지만 그녀는 신문 기사를 보고 혼절하게 된다. 그녀의 입장에서 연쇄살인마 사건은 월터의 죽음을 선고하는 셈이었다.

이후 영화는 두 개의 법정 장면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경찰이 부당하게 크리스틴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을 밝히는 청문회 과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공식으로 열리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재판이다.



●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었던 1920년대 LA 경찰은 여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괴된 아이 대신 다른 아이를 찾아주며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영화는 타락한 경찰에 대한 청문회와 연쇄살인범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준다. 그 두 장소를 오가며 앉아 있는 인물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연쇄살인범에 의해 아들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스틴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몇 번 등장한다. 법정에서 살인범은 자주 크리스틴과 시선을 교환한다. 자신이야말로 크리스틴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희생자(희생양)라고 항변을 한다. 아주 큰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시대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두운 재즈 시대의 희망

〈체인질링〉이 통과하는 1920년대를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대의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의 권리는 물론이고 인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한쪽에서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만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밀주가 횡행하는 타락의 시대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역사에서 1920년대는 종종 '재

즈의 시대'라고 불린다. 이 시대의 희생양이자 시대상을 대변하는 크리스틴. 그녀는 몰락한 시대에서 아들을 찾겠다는 열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열정으로 억울한 삶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옮겨 놓는다.

이를 함축하는 장면이 영화의 엔딩이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농장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서로 달려간 크리스틴은 아이의 진술을 통해 월터와 함께 농장에 있었고, 월터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하여, 월터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긴다. 경찰서를 나오며 크리스틴은 자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작가의 목소리가 배어 있다.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정의에 대한 추구는 여전히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정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희망만이 변화를 가능케 한다. 🌍

● 영화 체인질링(Changeling) ●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 출연 안젤리나 졸리, 존 말코비치, 게틀린 그리피스, 마셜 마틴

1928년 LA, 회사에서 돌아온 싱글맘 크리스틴(안젤리나 졸리)은 9살 난 아들 월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아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 매일을 수소문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크리스틴은 다섯 달 뒤 아들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찾은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다. 사건을 해결해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경찰은, 자신의 진짜 아들 월터를 찾아달라는 크리스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고, 아들을 찾으려는 크리스틴은 홀로 부패한 경찰과 세상에 맞서기 시작한다.

나도 대출이 될까?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서민을 위한 대출가이드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풀리고 있는데 경기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최대의 상권이라는 서울 강남에도 내놓은 상가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으니 영세상인을 주머니 사정이야 오죽하겠나 싶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4조 8,000억 원의 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잠시나마 자금난 해갈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88-5302로 다이얼을 돌려라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이곳에서 소상공인이라면 저렴한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1588-5302로 전화를 걸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소상공인과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이다. 수혜 대상이 1만 8,000명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기간을 거쳐 4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현재 4%대 후반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상담을 받은 후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높다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가 없으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결시켜준다. 여기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17개 시중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증한도는 2,000만 원까지며 보증비율은 100%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지난 해 2,875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례보증 공급액도 5,000억 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또 경기위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전업 지원자금 1,000억 원을 2,500명에게 공급한다.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폐업한 지 2년 이내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폐업한 후 재창업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같으며 소정의 교육, 컨설팅을 거쳐야 한다.

대출 길이 넓어졌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무점포 노점상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표적인 대상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졌다.

우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아서 업체당 4억 원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보증비율이 95%, 3,000만 원 이하면 보증비율 100%다. 보증료율은 0.5~2.0%다.

지방의 전통시장 상인은 5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은 해당 상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4.0%.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면 되고 만기 이전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무점포 노점상인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보증을 공급기로 했기 때문이다. 무점포 상인, 입점 무등록 상인 그리고 우유배달 등을 하는 개인 용역제공업자 등이 대상이다. 1인당 3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 9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들도 500만 원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보증비율은 100%며, 보증료율은 1%다.

서민 지원도 늘어

소상공인, 영세상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일반 서민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서민 가구에 연 2% 정도의 낮은 금리로 평균 1,000만 원 이내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시행기로 했다. 한 번 대출받으면 최장 5년간 쓸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가구 그리고 저소득 여성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대출시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해지는 대로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소액서민금융재단 역시 440억 원 한도로 저소득층 창업자금, 취업자금, 채무불이행자 생활자금 등을 공급기로 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희망드림뱅크는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이 서울인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1,500만 원까지 5년 동안 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용할 만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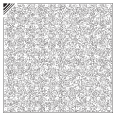
소상공인,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보건복지가족부	☎ 129
서울희망드림뱅크	☎ 1577-6119
새희망네트워크	☎ 1588-12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운전달인’도 아리송한 ‘뺑소니’

운전을 하다 보면 부주의에 의해 보행자
또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가해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당혹감에 올바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3에 해당하는
도주 차량죄를 범하게 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Q 사고현장에서 명함만 주고 가는 경우 뺑소니일까? 아닐까?

무면허 10년을 자랑하는 장롱 씨는 2009년 01월 02일 10:00경 졸음운전으로 앞 차를 들이 받았다. 이에 장롱 씨는 즉시 차에 내려 앞 차 운전자에게 “괜찮으세요?”고 물었다. 그러자 앞차 운전자는 “예”라고 하며 ‘살짝 부딪힌 것이니 그냥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장롱 씨는 자신의 명함을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얼마 후 장롱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제외)

A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어른이고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직접 말했다면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만 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규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무리 ‘괜찮다’, ‘다친 데 없다’고 말해도 보험회사와 경찰관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뺑소니, 증거 확보 중요

피해자가 어른이고 그 자리에서 다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직접 말했다면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만 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든 어린아이인 경우라면 아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을 해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헤어진다면 뺑소니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른이라도 자신이 어딘가 다친 것 같다고 말을 하면 병원에 이송하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른인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는 다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자신도 다친 곳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함을 건네주었다더라도 가해자는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두어야 하고, 만약 일단 사고현장에서는 그대로 헤어지고 나중에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면 그때 이를 부담해주기로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서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뺑소니 합의 시 요령

합의란 합의를 바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합의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돈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후 상대방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합의를 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합의에 응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다.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합의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가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넌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합의금으로 과다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다. 🌈

특가법 제5조의3(도로차량운전자 가중처벌)

대인사고의 뺑소니, 제54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것)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東亞日報

2009년 02월 11일 08면 (종합)

지하철 상가 보증금
30개월 치 월세 물려매점 청소불량 이유
임대계약 해지 가능500원 받았던 수수료
무려 60만 원으로 인상

권익위 “6개 공기업 황당 사규 고쳐라”

민간기업과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기존과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까다로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가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의 사규와 정관 503개를 분석한 결과 261건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공기업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느 서울메트로는 거래하는 민간기업에 사입비를 지급할 때 약정에 따라 계약이체 수수료를 거래 기업에 부담시켜 왔다. 서울메트로는 이면 계약이체 거래는 해마다 2,000여 건이나 된다. 한전도 전기 관련 인증시험을 위해 해외출

장을 나갈 때 신청업체에 출장 경비를 부담시켜 왔다.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 내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30개월 치의 월세(월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받다가 최근 18개월분으로 낮췄다. 하지만 인천 등 다른 도시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상점의 입지 여건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다르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다. 일부 공기업의 규정에는 임대료를 준 구내매점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500원 하던 조사수수료를 60만 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한국일보

2009년 01월 30일 06면 (정치)

권익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권고

복지부 반대로 수용여부 미지수

병원이 쓰는 일회용 의료기기 2만여 개 중 상당수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2.3번씩 재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사용 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병원이 진료비 부담청구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주무 부처에 권고기로 했다. 권익위가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막힌 혈관을 뚫는 일회용 기기인 카테터의 경우 평균 3.3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은 2차 감염을 일으킬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지만 개당 3만~200만원 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비리신고가 접수돼 확인이 나섰던 경기 부천시와 한 사립병원 카테터를 재사용하면서 매년 새로운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진료비 6억 2,000만 원을 부담청구했던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수입량에 비해 진료진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재사용 시 처벌규정 도입,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권고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안전을 내세워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고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ik.co.kr

朝鮮日報

2009년 01월 22일 08면 (사회)

“단순 교통사고는 범칙금·벌점 없게”

국민권익위 권고… 경찰청, 수용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찰관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의무적으로 가리도록 해 인적 피해가 없고 합의가 된 가벼운 사

고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 등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것이어도 ‘안전운전 부주의’ 등의 이유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재량이 작용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물적 피해만 있는 단순 교통사고에 부과되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없애도록 써 무사고 경력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운 기자 codo@chousun.com

세계일보

2009년 02월 05일 02면 (종합)

외국인 민원 신청 여권번호로 가능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내거주 외국인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

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동사무소에 발급 절차를 공지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 공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문화일보

2009년 02월 03일 10면 (사회)

중학교 육성회비 국가가 부담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 2012년까지 단계적 전환

현재 학부모가 납부하고 있는 중학교 육성회비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 부담으로 전환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보고했다. 개선과제 보고에 따르면 연 4,000억 원에 달하는 중학교 육성회비는 2012년까지 국가 부담으로 전환되며, 매년 국가 부담으로 전환되며, 매년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이공계 학생 5,000여 명은 앞으로 장학금 반납 없이도 소속대학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운영시간도 매일 1시간씩 연장, 연 280만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의 편의가 증진된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신장기준을 완화, 265만 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도 장기임대했다가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가대여 제한도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중학교 육성회비의 국가 부담 전환과 반환된 자동차의 단가대여 허용으로 연간 총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상공인 등 550만여 명에게도 규제개선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서울신문

2009년 02월 04일 25면 (사회)

간 큰 공무원 꼭 있다니까...

설 띄값 단속서 줄줄이 적발 권익위 “검·경 수사외의 검토”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음에도 공무원들의 급품수수 등 비리 행위가 줄줄이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직전인 지난달 12~23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백만 원대 급품수수 4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 인사시장을 맞아 보은성 인사청탁 뇌물이나 고가의 명절선물세트 등을 받는 전형적인 ‘관박이’ 비리 행태를 보였다. A광역시지자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한 7급 공무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남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 원을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 갑박만에 적발됐다. B광역시청의 건설업무를 맡고 있는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의 임원

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발미를 잡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C광역시청 6급 공무원은 청사 로비에서 연초 전 보 인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3명 중 중대한 위반을 한 4명은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수사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급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급품을 받고 위반·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해임,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00만 원 이상의 급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처분하지 않더라도 해임, 파면이 가능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민여러분! 신문고를 올리세요!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 옥상에 있는 용고 옆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란 공익광고 멘트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청와대 '신문고(龍鼓)' 활용 공익광고제작 화제

조선시대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를 칠 수 있다면...

그때처럼 복을 치긴 어렵지만 대신 정보화 및 표현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고충과 부정부패를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이다.

청와대에는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옥상에 큰 북(일명 용고, 龍鼓)이 있다. 높이 2m 길이 2.3m 크기.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신문고를 이용했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대형 북을 80년대 후반 상징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이것이 신문고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쓰지 않고 전사용으로 설치된 이 용고가 공익광고 소재로 전파를 타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에 접수된 온·오프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16일부터 KBS 등에 송출될 40초 분량의 공익광고에 이 용고를 실제 치는 장면을 기획한 것. 공익광고 '신문고' 편으로 명명된 이 캠페인은 정부가 어려운 이웃과 사업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책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면마다 배우들이 춘추관 옥상에서 용고를 친 국민들이 고충과 불편함을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면에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출현하여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뜻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며 마무리 된다.

이를 기획한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민 밀착형 생활공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일 잘하는 정부'를 알리기 위해 시도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소통창구' 코너와 함께 연동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전화 110,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새 정부들어 1년 동안 2만 7,372건, 신고건수가 매년 정체 수준이었던 민원이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하였다.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3월 20일)

‘기본 좋은 편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감사편지로 이루어집니다.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께서는 민원처리 등에 관련한 수기를 이메일(junmin79@acrc.go.kr)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3
2 C		4 5
6 A	7	8
9		B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가로 열쇠

- 본명은 황석상(黃錫祥), 무술가이자 명의. 그를 소재로 한 영화가 100여 편이 있고, 국내에는 이연걸 주연의 영화가 유명하다.
-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는 말.
- 조선 시대의 가정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팔취의 이복 언니.
-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지은 서사시. 동음이어로 새로 지은 곡을 말함.
- 대한민국 수도.
- 각종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에서 낭독하는 문장.

세로 열쇠

- 조선 시대의 명신(名臣)으로 세종 때에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면서 농사법을 개량하고 예법(禮法)을 개정하는 등 문물제도의 정비에 힘썼으며, 어질고 깨끗한 관리의 표본이 되었다. (본지 38~41p 참조)
- 탄성 고무로 만든 신. ‘검정 ○○○’
- 중국 광둥 성(廣東省) 남부, 주장(珠江) 강 어귀에 있는 섬.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84년 중국과 영국의 연합성명에 따라 1997년 주권을 회복했다. 아시아에서 청렴도 2위를 차지했다. (본지 18~21p 참조)
- 취방울덩굴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을 이르는 말. “○○○같은 녀석”
- 곡물의 다른 말.
- 머리말.

지난 호 퀴즈 정답

1번 : 국민고충 / 2번 : 정약용

11+12월 퀴즈 당첨자

박세라, 송재하, 원종숙, 윤보라, 이정윤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박세라(서울시 강동구)

청렴연구학교 수업을 통해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청렴해지겠다고 다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때는 더 이상 부패라는 것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재하(대구광역시 수성구)

법률적인 문제가 닥쳐도 법률에 관한 지식

이 없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어서 유익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원종숙(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싱가포르에서 반부패워크숍까지 열릴 정도로 부패척결이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부패 정책 집행을 강조하는

국민권익위의 다짐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우리 반부패 기술을 도입하는 뉴스를 접하니 국민권익위의 활동에 믿음이 갑니다.

윤보라(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처음 본 <국민권익>의 내용이 좀 생소해서 훑어보던 중에 ‘전월세 임차보증금 돌려받기’라는 제목의 ‘생활법률110’이라는 코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모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로 묶여계신 상황이라 이모에게 책자를 갖다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이정윤(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청렴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요’를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할놀이를 통해 청렴을 배워가는 아홉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저도 아이들이 사실보다는 진실을 깨우치며 스스로 청렴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임에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이 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②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③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④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 위원회로 개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계획에 따라 금번 기간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등을 대상으로 개선코자 하오니 해당 부처 관련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 2009.03.31.
- **담당자** :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김한창(click007@acrc.go.kr) / 경제분야 행정규칙개선팀 유승하(seungha@acrc.go.kr)
- **연락처** : TEL 02-360-6626, 02-360-6613 | FAX 02-360-6839

독자수기 공모

『국민권익』誌 3+4월호부터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문에 코너'가 신설됩니다. '수필·시·그림' 등을 통하여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되돌려 드리지 않으며, 편집분량에 따라 원고 길이나 문장을 다듬어 실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5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단, 다른 책자에 중복 게재 되었을 경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제** : 우리의 '권익', '내가 생각한 국민권익' 등 기타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 13매 또는 A4용지 1매(수필 A4 1매, 시 1~2편, 그림 1점)
- **보내실 곳**
 - 우 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대변인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 이메일 : junmin79@acrc.go.kr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호소를 듣기 위해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 신문고!

그 정신과 함께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국민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저 멀리 독도까지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